

- 이 책에 게재된 강연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강연 순서

▶

15:30~15:40

위원장 인사말

▶

15:40~16:50

칸트에서 법·윤리의 조건과 바탕

(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16:50~18:00

유학사상과 정의

－ 중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하여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입니다.

위원회 창립30주년 기념 초청강연에 와주신 전·현직 중재위원님과 강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기념강연을 맡아주신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과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담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담론 가운데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삶을 보람 있게 도와주는, 깊이 있는 담론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소설제목에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말한다면 「참을 수 없는 담론의 가벼움」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에서 언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숙명과도 같은, 역사적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석학들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현실을 보는 풍부한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제 1 강연>

칸트에서 법 · 윤리의 조건과 바탕

백 종 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강연자 소개

백 종 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학 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문학사(1973)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문학석사(1975)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철학부 철학박사(1985)

주요경력

- 한국철학회 법인이사
- 한국칸트학회 회장
-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 (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 서

- 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
- 존재와 진리-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 서양근대철학
-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윤리개념의 형성
-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사회 운영 원리
-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
- 시대와의 대화 : 칸트와 헤겔의 철학

칸트에서 법·윤리의 조건과 바탕

백 종 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백종현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권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소상히는 모르지만 평소에 조정, 중재, 화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사회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줄곧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어느 작은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돼서 산적해있던 송사를 짧은 기간에 다 해결하여 명성이 자자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소송을 듣고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과 같이 할 수 있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것을 잘 판가름을 하는 일은 나중의 일이고, 그 사회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하고 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송(無訟)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거북해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하면 병원에 환자가 하나도 없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입니다. 이미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잘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치료거리가 없게 먼저 보건, 위생을 신경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정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분쟁사건이 발생할 텐데 그럴 경우에도 재판소에 가기 전에 먼저 조정, 중재,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으면 취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칸트와 한국의 법과 윤리

우리 헌법 제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그 양심에 따라'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양심에 따라'라는 대목 때문에 헌법 103조는 법률가보다는 철학자들이 해석해야 할 소지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하게 되면 잘 해결될 것도 같지만 로마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최고의 불의다" 즉, 법대로만 하면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법대로만'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여지, 즉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과 윤리를 말하는데 느닷없이 칸트가 왜 등장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사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한국 법률 체계는 칸트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 법의 근간은 자율성 기반으로 하는 인격주의, 만민평등주의, 국제평화주의 이 세 개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바로 이 세 개의 원칙이 칸트의 법정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칸트의 저술가운데 윤리, 도덕, 법철학에 관련한 중요한 저술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1805년경에 형법학자 포이어바흐(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1775~1833)가 독일의 근대법을 정비합니다. 그것이 후에 현대 독일법의 토대가 됐고, 그 법률체계가 일본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법률체계로부터 우리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한국의 법률체계는 조선의 경국대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법률체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결국 칸트의 법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한국에서의 칸트에 대한 연구

19C말 우리가 서양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유학자, 불교학자들이 직접 서양학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연구되고, 소개된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그 시발점을 1905년 유학자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강씨철학설대략(康氏哲學說大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씨'는 칸트를 지칭하고, 위의 책은 지금으로 치면 칸트철학개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 최초로 서

양 학자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판된 책은 아니었고, 최초의 출판물로는 1910년 승려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의 저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教維新論)'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칸트의 심성론과 주자의 심성론, 불교의 심성론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여서 전통으로 갖고 있던 어떤 지적인 자산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저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게 칸트 정신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은 1930년 최현배(崔鉉培, 1894~1970)의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책은 1926년에 6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한 내용을 묶어서 발간한 책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도덕 강령서입니다. 그때 내세웠던 여러 도덕 강령들이 칸트의 도덕사상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현대 한국을 정신적으로 건설하는데 칸트는 상당한 자양분을 제공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과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당위와 그 조건 : 자유

· '당위'는 이념에 따른 행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법과 윤리는 모두 이 당위의 세계에 속합니다.

당위의 세계 언어는 서술형이 아닌 명령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해야 한다. ~하지 마라." 등 모두 금지, 지시, 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당위를 우리는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규범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규범의 근거가 '이념'입니다. 따라서 당위는 이념에 따라서 세운 규범이고, 그 이념에 따라 인간은 행위를 합니다. 물론 인간도 자연적인 존재이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무리 잘해도 상주는 일도 없어요.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땅히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이념을 세워서 그 이념에 맞춰서 행동을 하도록 강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위입니다.

· 도덕법칙은 자연에 독립적인 운동으로서 '자유'를 전제하고서만 가능

법도 당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밝혀져야 법이 성립됩니다. 국가에서 한 개인에게 상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인간을 자연세계에 속한 존재로 봅니다. 인간을 자연물로 보는 것을 '물리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과 같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살펴본다든지, 또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친구는 어떤 사람을 사귀었나,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등을 다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발시켰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벌이나 상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찾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와 동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동정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상줄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좋은 환경을 타고 나서 복 받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처럼 상과 벌은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 자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전제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원인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대립되는 개념인 '자연'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는 그 인과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인간인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근대 이후의 자연과학은 점점 인간의 삶에 자유가 들어갈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물리주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물리주의가 만인에게 진리로 납득이 되면 지금의 윤리체계나 법률체계는 전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거의 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 판정은 이제 의사가 하게 되겠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처방을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은 의사들이 할 일이지 판사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철학도 거의 쓸모없게 됩니다.

칸트는 이 '자유'를 구출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유를 구출해내면 법과 윤리가 설 지점을 얻습니다. 만약 자유가 구출이 안 되면 법과 윤리는 자기 근거점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이 '자유'를 어떻게 구출해 내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는 귀책성 곧 인격성의 원천

먼저 칸트의 인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구성하는 소질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동물성**의 소질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동물입니다.

칸트 이전의 학자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인간은 적어도 3/4은 동물성으로 채워진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75%는 동물성이 25%는 이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라이프니츠가 인간을 너무 이성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분명히 자연 세계에 속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2.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성의 소질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의 개념은 그리스어로는 로고스(logos)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라티오(ratio)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 라티오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계산하고 셈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말도 하고 셈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우리가 학교 가면 국, 영, 수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목들이 인간을 이성적 동물에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귀책능력이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성의 소질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에 그 이성의 핵심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귀책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책임을 질 능력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개는 존엄하지 않은가. 왜 오만하

게 인간만 존엄하다고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만이 존엄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만이 귀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생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뜻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칸트의 도덕규칙

칸트는 “도덕규칙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인 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순(矛盾)이란 말은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나라의 어느 무기 상인이 자기가 파는 무기들을 펼쳐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선전을 합니다. 이 ‘창’은 매우 날카롭고 강력해서 세상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옆의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매우 견고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기상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가지의 말이 상충되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긋나게 말함’이라는 뜻의 라틴어 contradictio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은 논리적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앞의 상인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이성’이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칸트는 ‘논리적 규칙이 자명하듯이 도덕규칙도 자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칸트가 도덕규칙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준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학점을 줄 때 채점기준을 학생에게 리포트 제출 숙제 10번을 내주고 10번 다 낸 사람은 A, 9번 낸 사람은 B, 8번 이하로 낸 사람은 C 이렇게 학점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 교수의 준칙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오직 리포트 제출 횟수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형식만 맞춰서 10번을 낸 학생이 A학점을 받고,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8번만 제출한 학생이 C학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규칙이 보편적으로 이의 없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통용될 수 없다면 이 준칙은 하나의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세운 준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만 도덕법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까 든 예를 다시 보면 교수가 학점을 줄 때 리포트 제출 횟수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일일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가 힘들어서겠지요. 힘드니까 좀 편하게 채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입니다. 정성스럽게 내용을 읽고 채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령(당위)으로서 그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자연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규칙은 항상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에는 아무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이웃사람을 도와라.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인 명령은 항상 정언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조건부명령을 가언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 여유 있을 때 이웃사람들을 많이 도와라." 이것은 앞에 조건이 붙어있는 명령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도덕, 윤리 교육보다는 처세술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하면 아이가 왜 친절해야 하나고 그 이유를 묻겠죠. 그때 "네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네가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웃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이웃에게 친절해야한다'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종의 처세술이지요. 그러나 도덕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당위적 행위: 의무

명령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법과 윤리가 갈라집니다.

· 의무의 두 종류 : 법의무와 윤리의무

법의무는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일단 의무만 지키면 그 행위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윤리의무는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윤리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의사아들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머니에게 앞으로 월30만원씩 줄 테니까 따로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30만원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머니 사망시까지 아들이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달에 50만원씩만 주면 법원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합니다. 아들은 법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윤리의 의무까지 다 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달에 한번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작은 아들은 매주 찾아갑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아들이 더 효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아들은 자주 찾아뵈어야 아버지가 자기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실 거 같아서 매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것은 외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은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윤리는 매우 내적인 것이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도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칸트사상을 법철학으로 체계화 한 사람이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 ~ 1973)입니다. 켈젠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윤리 중에서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만 외적 규범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법도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법과 윤리의 바탕

칸트식의 법이나 윤리가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도덕감과 양심이 바탕에 놓여있지 않으면 칸트의 윤리철학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도덕감정'이란 나의 행동이 의무의 법칙에 부합하면 기쁨을 느끼고, 의무법칙에

어긋나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도덕감정을 '양심(良心)'이라고 바꿔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개념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컨시언스conscience가 되고, 이것은 '함께 안다'는 뜻의 라틴어
conscientia에서 왔습니다. 즉, 공동지성을 뜻합니다.

이제 앞의 헌법 103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때의 '양심에 따라'는 너와 내가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 굳이 토론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야만 위의 법문이 성립됩니다. 양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윤리, 도덕세계를 보편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법률로서 심판하기도 어렵습
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
리 사회 안에서 '양심'에 대한 공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여 우려가 됩
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강연>

**유학사상과 정의 -
중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하여**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장

강연자 소개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학 력

- 미국 Carleton대 경제학 학사(1980)
- 미국 Johns Hopkins대 정치학 석사
- 미국 Johns Hopkins대 정치학 박사(1992)

주요경력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본부 사회과학국장
- (현) 아산정책연구원장

저 서

- 탈근대와 유교
- 21세기 한국정치
- 한국의 보수주의
-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외 다수

유학사상과 정의 -

중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하여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성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유학에서 다루는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도(王道) V. 패도(霸道)

“힘으로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복종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약해서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종이다.”

맹자 공손추(公孫丑) 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왕도와 패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알려주지요. 왕도를 얘기할 때 핵심은 ‘덕치(德治)’입니다. 패도란 힘으로써 남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고요. 패도를 영어로 얘기하면 Power Politics입니다. 그런데 동양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Power Politics를 넘어서 ‘덕치’입니다. 영어로 ‘Ruler Virtue’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왕도와 패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Power 대 Authority 즉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권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는 누군가가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위를 권력 또는 폭력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권위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폭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

태의 것이다. 만일 권력, 폭력이 개입이 된다면 그 순간 권위는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진정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권위는 없는데 권위주의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나 아렌트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아팠을 때 사람들은 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리면 사람들은 그대로 따른다. 의사의 권위에 굴종하거나 복종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매우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 권위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매우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권위자가 하는 얘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거라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권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스스로 익히고 배워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 권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권위’의 성격은 ‘권력’과 ‘설득’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권력’, ‘폭력’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설득’은 누군가와 앉아서 이견 이렇고, 저견 저렇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위는 권력관계가 가지는 위계질서의 면과 설득이 가지는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진정한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덕치’의 핵심이지요.

◇ Soft Power, 중화주의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표방하던 중화주의에는 보편성이 있었습니다. 중국문명에 진정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요. 중국이 강요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국불교는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도교 문명과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문명이 몇 백 년에 걸쳐 융화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불교라고 부르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중국 전도자가 와서 전파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자발적으로 '이건 정말 선진문화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 문명을 직접 보고 배운 유학생들은 돌아와서 그것을 번역하고 설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의 선진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국에는 어떤 패도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권위가 있는 덕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조선조에 받아들인 주자학도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배워 온 것입니다.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주자학을 받아들여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고려 말에 유학자들이 주자학을 배워 와서 주자학에 기초한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자학을 진정한 선진문명으로 본 것이지요.

사실 중국의 문명은 우리에게는 항상 보편타당성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것은 인도 것이다, 중국 것이다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법흥왕은 불교를 흥하게 하여 법국을 만들려고 했었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은 우리역사에 있어서 어떤 패권을 행사한 국가라기보다는 문명을 전수해 준 나라였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프트파워가 중국문명의 핵심이었죠. 물론 여진족,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후방정리차원에서 우리를 침입하기도 했지만 중국 주류문명이 들어섰을 때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중국의 보편문명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략할 필요가 없었지요. 원래의 중국은 덕치, 소프트파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국 문명은 보편타당한 문명이었고, 주변의 오랑캐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문명적 우월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중화주의입니다.

◇ 중국의 패권주의

그런데 현재 중국이 가진 문제는 왕도의 핵심인 보편적인 가치나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체제나 사상, 철학 중에서 '이건 보편타당한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중요한 수출시장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학문, 정치제도, 세계관, 가치관에 관심을 갖지만, 이것은 중국에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이지 중국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중국은 경제력만 있을 뿐 어떠한 소프트파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덕치, 소프트 파워에서 오는 자신감, 우월감도 사라지고 국수주의, 민족주의만 남았지요.

중국의 국수주의는 중국이라는 문명이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예전의 중국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중국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중국의 것이니까' 지키려는 모습이 역력 합니다. 인권유린이 있고 없고, 민주적이고 아니고 하는 보편적 잣대는 거부하고 우리 문제니까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제국'이 아닌 '민족국가'로 규정합니다. 이전에 중국은 항상 자신들을 제국이라 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국은 항상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다양한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만제국에서 이슬람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국일 때 중국은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오랑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문명의 힘으로 그들을 교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화문명이 중심에 있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갈수록 아직 문명의 힘이 미치지 않은 야만인들이 있는데, 이 야만인들도 중화문명의 우수성을 알고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사해가 다 문명권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의 질서는 보편적인 질서이다. 다른 민족들이 우리가 갖는 보편타당성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것이 바로 중국이 제국일 때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국일 때의 중국은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어디부터가 중국의 바깥이라고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습니 다. 스스로를 중국이란 특수성으로 한정짓지 않았던 것이지요. 중국은 그야말로 문명의 중심이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문명이 열어질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C에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이 바로 민족국가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서양문명이 물밀 듯이 올 때에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했습니다. 물질문명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되, 정신문명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했지요. 자신들이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국이 후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을 때도 보편문명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역시 국적, 민족, 인종,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더 이상 보편타당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 일민족국가다'라고 주장합니다. 수천 년 동안 보편 문명으로 자신을 규정하던 제국이 느닷없이 민족이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재규정한 것이지요. 이러다보니 고구려가 중국 것이었냐, 한국 것이었냐 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동북공정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중국 영토 한국 영토 이런 개념도 없었던 때였고,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민족으로 규정도 안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5천년 만에 갑자기 '우리는 200개 UN회원국 중 하나인 차이나라는 민족국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자신 있게 크게 보던 제국이 점점 왜소해지다가 이제는 자신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보편문명으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스스로를 더 작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제력은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 아주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힘

중국이 몇 천 년 동안 해오던 역할을 현재는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편적 가치관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한 나라의 특수한 것이 아닌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몽주, 정도전이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사상과 같은 보편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실해버린 문명으로서의 보편타당성을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EU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동구권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 정치 체제를 다 바꾸면서까지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WTO와 OECD에 들어갈 때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합니다. 사실 EU의 기존 회원국들은 이제 그만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변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EU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12개 회원국밖에 없던 EU는 현재 27개국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도 EU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EU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파워와 더불어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최근에 벌어진 리비아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리비아 사태는 리비아 내부의 일입니다. 카다피가 이미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저항 세력이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리비아 내부 문제에 미국, 나토, 아랍연맹이 전부 군대를 파견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미국이 정한 기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리비아 사태 개입에 펄펄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이지요. 중국의 논리는 항상 같습니다. “내정간섭하지 말아라. 국제사회는 각자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민족국가들의 연합체이고, 각 국가들 내부의 내정은 절대로 외부 국가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국제질서의 근거는 독일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독일에서 벌어진 신교와 구교간의 종교전쟁이었는데요. 베스트팔렌조약 체결로 국가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외부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대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권’의 논리가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정부가 자국 국민을 다루는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노출되면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지요. 아무리 주권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인권유린, 학살이 있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강요합니다. 그 중심에 서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왕도(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와 그 왕도를 강제할 수 있는 패도,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중국의 고민

중국은 지금 흔히 말하는 '100년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을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5·4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 중국의 집요한 문명비판이 계속됩니다. 루쉰의 '아Q정전'을 보면 유교를 식인(食人)의 문명으로 표현하며 중국 전통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루쉰을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모택동입니다.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 정신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 고유의 정신문화뿐 아니라 물질적인 문명도 없애버립니다. 홍위병(紅衛兵)들이 남아있는 공자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찰들을 다 부숴지죠. 중국은 자신의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사회주의를 그 대안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이 대안으로 택한 사회주의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모택동이 추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지요. 대약진운동으로 3~4년 만에 중국인 4천 만 명이 굶어죽었습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만회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광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고요. 모택동이 죽은 1976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인 누구도 모택동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사상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덩소평이 집권하기도 전에, 즉 개혁, 개방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들여오기도 전에 이미 중국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불교문화, 유교문화를 버려야 할 전통으로 치부하여 다 없애버리고, 사회주의마저 실패한 중국에 이제 남은 것은 덩소평의 개혁, 개방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자'라는 생각만 있을 뿐 중국의 정신문화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서양의 학자들이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며 중국의 정신문화의 부재가 너무 확연하게 들어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경제발전의 속도에서는 뒤지

지만 아직도 정신문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 시인들, 종교인들이 정신적인 영감을 얻고자 여전히 인도를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인도는 아직도 많은 종교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정신문명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붙잡은 것이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패권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부상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기대한 바가 컸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국을 잘 관리하면 우리와 서로 평화롭게 교역을 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서양의 많은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중국이 책임대국 (Responsible power)이 될 것을 기대했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 행동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지금 월드뱅크 총재인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이 국무부차관 시절에 중국에게 책임감 있는 대주주의 역할 (Responsible stakeholder)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국도 나름대로 평화굴기(平和掘起)론, 즉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학자 중 다수가 중국이 성공적으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질서 안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국제 질서를 흔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명백한 잘못을 감싸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더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국 중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은 그저 또 하나의 패권국가로 커버린 것이지요.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수단, 미얀마와 같이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독재 정권이 있는 국가여도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기업이 다른 국가에 진출하려면 그 국가의 잘못된 관행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독재국가와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중국은 바로 이런 국가에 들어가 사업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점점 양분화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자신들의 보편타당한 체제와 제도를 국제사회에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개혁 · 민주화를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거래하며 자신들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옛 소련 항공모함 바라크호 개조를 거의 끝내고 곧 진수식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해로를 열어 자유통상무역을 하는 나라라면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미국의 해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혜 국가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미국을 못 믿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언젠가는 미국이 경계하고 해역봉쇄를 통해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다. 우리도 대양해군을 키워야만 한다.”라고요. 이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입니다.

◇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수록 가장 곤란해지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두는 흑자가 연 400억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점을 잘 알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중국이 과거 등소평 하에서 경제발전에만 몰두하던 때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지요. 1991년, 소련붕괴이후 하루아침에 북한 무역고의 50%가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무역대금의 경화결제(硬貨決濟)를 요구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은 소련과 경쟁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에 원조를 했었는데,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서방세계의 투자가 끊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니까 북한에게도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중국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몇 달 뒤에 한중수교를 맺었지요. 북한은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1995년부터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 때 북한 주민 350만 명이 아사하게 됩니다. 북한정권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90년대 말부터 우리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시작하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재개하면서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체제에 보장을 약속 하지요. 2010년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며칠 후에 중국은 바로 김정일의 방문을 받았고, 불과 몇 달 후에 후진타오 본인이 동북3성으로 가서 김정일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에 나서는 것은 평화굴기하겠다는 중국 기존의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지요.

미국이 경제 위기로 휘청하는 동안 중국은 전혀 흔들림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봐라. 결국엔 우리 체제가 맞았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실패한 제도이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지요. 등소평 때만 해도 북한을 자신들이 계속 떠안고 가야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북한에 계속 개혁, 개방을 요구해 왔었는데, 지금 중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개혁, 개방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왕도도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왕도에 편입하는 것도 거부하고, 패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순전히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속 좁은 민족국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계속해서 단일민족국가로서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한·미·일 공조뿐입니다. 우

리가 미국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지요. 중국이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같이 공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미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길 요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중국이 패도를 추구하는 이상 우리의 안보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는 중국 사람들 만날 때 마다 “중국이 계속 지금처럼 행동하면 한국을 아예 미국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인들도 조금은 아차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미·일이 강한 공조를 이루게 된 것은 결국 중국 때문이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런 주장은 거의 없지요. 한·일간에는 군사협력문제까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인도 전부 미국동맹국들입니다. 그 방어선들을 뚫고 나면 또 괌, 호주 등의 또 다른 미국의 봉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저지선들을 뚫기 위해 대양해군을 키우고, 공군력을 키워서 미국과 맞서려 한다면 중국이 얻을 실익은 없습니다. 중국은 예전 제국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길러서 남들이 저절로 따르고 싶은 어떤 것을 다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처럼 말이지요. 서양의 학자들도 이 논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중국은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문명과 자신의 문명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 시간에 중국이 새로운 보편 문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패권국가의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패권국가로서의 중국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 체제 변화, 북핵 문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2, 9027 팩스 :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1, 8083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0, 1787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팩스 : (064) 726 - 3201